



자원봉사 등록 늘었지만 참여율 10년 새 '1/3토막'

10년 새 등록률 21%→33%… 참여율은 56%→18%
코로나19 장기화·수능 미반영 10대 등록 저조 이유
마일리지 상향·봉사문화 확산 행정 정책 마련 시급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등록자는 매년 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참여율은 10년 새 1/3수준으로 급락하며 제주도 차원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10대 청소년에 의존했던 자원봉사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범도민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인구는 67만 368명이며 이 가운데 21만861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며 등록률 32.6%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자원봉사자 중 실제 자원봉사에 나선

비율인 참여율은 17.7%에 그치며 대부분은 등록만 해놓고 정작 알맹이인 자원봉사에는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지역의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높아졌으나 자원봉사 참여율은 1/3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 10년간 도내 자원봉사자 등록률·참여율은 ▶2015년 20.7% (22.0%, 전국 평균 이하 생략)·55.9% (32.9%) ▶2016년 20.7% (21.3%)·63.7% (41.6%) ▶2017년 22.5% (23.2%)·53.5% (40.5%) ▶2018년 23.8% (24.7%)·43.6%

(33.4%) ▶2019년 26.6% (동일)·30.5% (30.3%) ▶2020년 27.5% (동일)·15.7% (15.6%) ▶2021년 28.2% (28.4%)·11.8% (12.6%) ▶2022년 29.1% (29.0%)·13.5% (12.7%) ▶2023년 30.9% (30.1%)·17.1% (13.4%) ▶2024년 32.6% (31.1%)·17.7% (13.7%) 등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55.9%에서 지난해 2024년 17.7%로 크게 줄었다. 주된 감소 이유는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2017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봉사활동 반영이 제외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022-24년) 제주도민들의 자원봉사 등록률과 참여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다만 수

능에 봉사활동 부문이 미반영되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최근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제주는 전국에 비해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두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원봉사와 관련 “최근 7년간 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기준 참여율은 43.6%였으나 지난해에는 17.7%로 급감했고 참여자 수 또한 7만1900여명에서 3만8700여명으로 46.2%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의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상향과 공영주차장 할인 시행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기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금탁기자

농막 중고거래 사기 일당 모두에 징역형 구형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법적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농막(33㎡ 이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점을 노려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전원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22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2명에게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에서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대체로 고가인 품목을 중고거래가 서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제주지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고개 숙인 관광객들 22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강한 맞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로 침수·전신주 파손… 비바람 피해 속출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배수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오전 10시38분쯤

제주시 용담3동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각 통신선과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또 이날 낮 12시51분쯤 제주시 해안동 광령천에서 고사리 채취객 8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4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4명은 하천 수위가 줄어드는 대로 개별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겠다고 소방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와 제주산지, 동부·남부·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김채현기자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첫 적발 선관위, 이재명 경선 후보 반대 영상 상영 40대 고발

제주지역에서 21대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과 인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험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선관위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사건은 21대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내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당직을 보유한 당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선거여론조사 결과·왜곡·공표·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공무원 등 선거관여·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투약 ‘허술’

담당 수의사 등 휴가 중에도 처방 후 진료기록부 작성

감사위, 동물위생시험소 등 감사… 25건 적발 시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물보호관리시스템에 우선 기록 후 투약하고 담당자가 복귀한 다음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됐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 부정적 사례 25건을 적발하고 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담당 공무원 11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난 2024년 11월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가 중인 수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했고 2021년부터 2023년에도 취급 승인을 받은 6명이 휴가 중인 데도 종 797마리를 대상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7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우선 기록 후 투약하고 담당자가 복귀한 다음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됐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씨수 말 구입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구입대상 요건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는 등 구입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와 계약행위 없이 특정업체에 선 시공 후 대가를 분할 지급해오다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에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원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에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에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 와이에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면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에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밀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밀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밀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하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다. 이는 와이에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이 의심되면 방지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지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대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 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지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리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와이에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에스의 센스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에스 보청기

이 제품은 '외로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상의 심의번호 2010-GN160079

※ 자세한 사항은 와이에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와이에스 보청기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박사수료
산학협력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재활사

